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1.08.31. _ Vol.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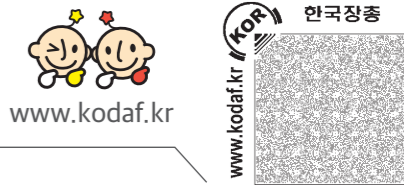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

장애계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 제공,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등을 이룩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제18대 대선부터 논의되어오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대표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현 정부 말기에서야 기본법적 성격의 제정방향을 발표(2021. 8. 2.)한 상황으로 새로운 논의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각종 정책 관련 시범사업을 경험하면서 제한된 프레임에 갇혀 법, 제도 설계의 취지와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해온 경험이 있다. 현재 시점은 법 제정에 대한 의미 부여 가능성 여부와 제정 이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히려 법제정 자체의 이슈보다 법제정 필요성과 핵심가치에 더 주목해야 할 때이다. 권리보장법에 담아내야 할 핵심가치와 프레임에 대해 살펴보자. 권리보장법 제정. 이제, 시작이다!



I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 누더기 땀질 법,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출발하여 지난 40년간 6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
- 하지만,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 탈시설과 통합돌봄 논의와 함께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필연적인 요구를 담아내는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 즉, 의료적 기준의 개인적 능력의 한계에 따라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장애인복지법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복지제도는 이를 해결하기 힘든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법적 기반 필요

-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공고한 법적 토대 마련 등 실질적 조치가 미약한 상황임
- 무엇보다 개인 외 사회, 환경적 요인이 반영된 장애 정의의 재수립, 서비스지원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권리보장,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와 평등실현, 장애인의 최소한 소득보장 실현,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옹호 할 수 있는 선진적 법안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등급제폐지 운동을 통해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 즉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2012년 및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은 장애인 정책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약속한 바 있으며,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에 이름



국정운영5개년계획 대국민보고대회(2017. 7. 19.) 문재인대통령 인사말 사진 @KBS뉴스 홈페이지

■ 법 제정 추진 활동 경과

- 2012~13년 : 법제정 필요성 제기, 논의 시작
- 2014~16년 : 장애계 법안 마련 및 통합안 논의
 - 2014. 8.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초안 공개
 - 2014. 12.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초안 공개
 - 2015~16년 : 양 단체 통합안 논의 및 마련
- 2017년 7월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 2017~19년 : 제20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
 - 2017. 1. 24. :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2019. 7. 18. :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2019. 7. 19. :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2020~21년 7월 : 정부연구용역, 민관협의체 운영



II 미뤄둔 숙제 마냥 4년 만에 응답한 정부

정부가 밝힌 법 제정 추진방향

-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한 이래, 2021년 2월 4일 4년 만에 '2021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1차회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추진방향을 밝힘

1 법 제정방향

- 장애인 권리기반접근
 - 국제적흐름을 반영하여 대상화, 객체화를 지양하고 권리주체성 강화.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확히 규정
- 기본법 형태 제정 추진
 - UN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장애인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하는 기본법 형태로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장애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여 장애관련 법령 제·개정 및 해석의 기본방향 제시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개편
 - 필요시 개별법도 함께 개정하는 방향 검토
-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따라 전달체계 마련

2 장애인권리보장법 주요내용(안)

- 목적
 -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장애인정책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본이념
 -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완전한 사회통합 달성을 기본이념으로 함
- 주요내용
 -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 규정
 - 총칙, 장애인정책 추진체계(종합계획, 정책위원회 등), 장애인 정책 기본방향 및 제도 운영 방안, 권리옹호 및 권리침해 방지 등으로 구성

3 장애인복지법 개편방향

- 개편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면 개편 필요
- 개편방향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수요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 규정
- 주요내용
 - 권리보장법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수요와 욕구에 대응하는 개별적 서비스 규정
 -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소득보장서비



스,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등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비용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규정

- 특히 장애인복지법을 서비스와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시설 설치·운영 등 서비스제공기관 중심 규정에서 탈피

※ 관련조항

- 제2조(정의)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III 제20대 국회 발의안¹에 담겨있는 변화상(變化像)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결의대회 모습 (2017. 12.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 의료가 아닌 권리의 시각으로, 새로워진 “장애”정의

- 장애인인권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의학적 관점의 장애정의를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함
- 인권과 환경적 요인을 장애개념에 명시, 장애인 정책이 권리에 기반 하여 실시하도록 함

■ 장애인정책 기구의 형식적 운영에서 상시 운영으로, 정책 기획·평가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시적 조직 형태의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전환,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 주도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역할: 장애인종합정책 수립,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 장애인정책의 이행 감독·평가

※ 관련조항

- 제12조(국가장애인위원회)

제12조(국가장애인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역할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5248, 2017. 1. 24.) 기준



- 제16조(지역장애인위원회)

제16조(지역장애인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계획 및 예산을 심의·조정하고 제68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감독·조사하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계획 및 예산 심의
-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감독 및 조사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심사청구 업무 수행

■ 행정 편의적 서비스 지원이 아닌, 개인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 지원 방법, 복지서비스의 장·단기 목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결과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으로 수립함
- 기존에 장애인은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서비스만을 받았지만, 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직접 복지서비스를 구매하고 계약하는 주체가 됨으로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관련조항

- 제53조(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신청)

제53조(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서는 본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제5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5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²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장애인의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의뢰한다.

- 제62조(복지서비스의 구매·계약)

제62조(복지서비스의 구매·계약)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복지서비스를 구매·계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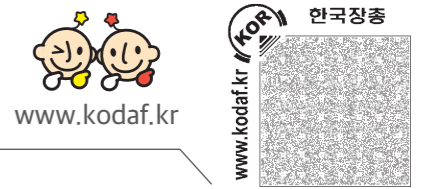
1.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여 계약
2.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구매를 대행하고 장애인이 계약

■ 권리침해 방지에서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로, 권리옹호 체계 구축

- 장애인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 등을 위한 ³ 중앙·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³ 설치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권리침해의 대한 근본적인 대응 장치로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법원에 장애인권익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²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제67조)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역시도 및 시군구) 설치(제68조)를 제안하고 있음

³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업무 외에도 권리 침해 전반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옹호활동을 그 역할로 규정함



※ 관련조항

- 제28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제28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한다.

1.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2.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업무

-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대한 지원
-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홍보, 실태조사, 자료 발간
-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연계·협조 체계 구축
-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보급
- 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상담·조사의원의 직무교육
-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소송 및 그 밖의 법률구조활동
-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장애인 권리침해 정보 시스템의 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전국적 범위의 업무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 업무

- 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
- 권리침해를 받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가족 및 장애인 권리침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사정 및 결정 과정의 권리옹호 활동
- 장애인 판정,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 따른 중재
-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및 조사
-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소송 및 기타 법률구조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권리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
- 장애인쉼터의 위탁 운영
- 후견인 변경 신청 및 친권,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청구 등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업무

- 제34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 제52조(비용의 청구)

제34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장애인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제52조(비용의 청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인 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시설 소규모화에서 탈시설 전환, 그를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근거 마련

- 그동안 인권과 비리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삶의 방식을 종식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탈시설 ⁴ 제도 도입과 거주전환지원계획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시설 장애인들의 실질적 탈시설 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⁴ 장애인 탈시설 관련해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외, 2020. 12. 10.)이 발의된 상태이고, 정부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로드맵(2021. 8. 2.)을 발표한 상황임.



※ 관련조항

- 제82조(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 제83조(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

제82조(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전환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3조(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

①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8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거주전환지원계획(이하 "거주전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거주전환 조치 대상

- 사후 지원 피해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거나 자립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장애인 거주시설로부터 탈시설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로부터 탈시설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전환서비스지원 대상자

■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 예산근거 마련

-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 도입으로 장애인권리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장애인지예산의 도입 및 실시 된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됨
-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지예산의 수립 및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됨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장애인지원기금 마련, 장애인권리를 위한 활동에 사용

※ 관련조항

- 제2조(정의) 제4호 "장애인지예산"

제2조(정의)

4. "장애인지예산"이란 장애인의 평등권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편성·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장애인지예산의 배분·조정 방법

- 1) 중앙행정기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 중 장애인지예산 관련 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국가장애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려야 함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장애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제17조(장애인지원기금의 설치)

제17조(장애인지원기금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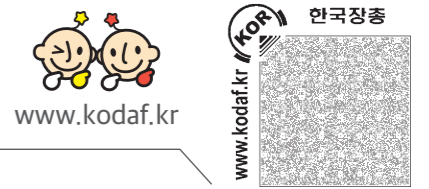
① 국가는 이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장애인지원기금 재원 조달 방법

-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기금 사용 사업

- 장애인 복지 및 권리옹호 관련 전문연구의 지원
- 장애인단체, 장애인가족단체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장애인의 국제교류 지원
- 장애인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원조



-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옹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발의안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환경 변화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고,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모든 기능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된 장애인 관련 종합 법률안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 내 여러 부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가 소관하여야 하는 범부처·범부처 소관 법률안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내용과 그 집행체계가 지나치게 비대(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안 기준, 총 7장, 171조로 구성)하므로, 정부의 특정 부처와 특정 부처 내 특정 부서가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안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정부의 대응입법 의지를 약화시키게 되고, 국회 역시 이 법률안의 심의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국회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있었음
- 아울러, 2017년 1월 24일 최초의 장애인권리보장법 통합안이 발의(양승조 의원 외)된 이후 각 정책 분야별 제도개선 및 관련 법개정 요구를 비롯하여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안 발의(2020. 12. 10.), 정부의 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로드맵 발표(2021. 8. 2.)는 물론,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0. 06. 0), 장애인학대관련조치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2020. 12. 29.)등의 다양한 환경변화가 진행됨
- 비록 현 정부의 말기에 발표되었지만, 정부의 기본법적 성격의 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의 추진 방향을 기본으로 기존 문제

제기와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체적 법안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IV 좀 더 구체화된 정부법안 내용, 장애계 바램 담아낼 수 있을까

■ 정부의 구상(構想) 공개, 법안 주요 내용

- 앞서 언급했듯, 정부는 2021년 2월 4일 4년 만에 '2021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1차회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추진방향을 밝히고 민관협의체 회의를 진행해옴
- 이와 관련 최종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를 개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함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발표내용을 토대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통해 장애계가 바라는 변화상을 담아낼 수 있는지 가늠해봐야 할 시점임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2021. 8. 2) 화면. (KTV 캡처화면)

① 장애 정의 확대

-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 개념을 반영, 장애의 개념을 의학적 기준에 따른

‘개인의 손상’에서 ‘사회적 장벽’으로 확대

- * (사회적 장애)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장애의 원인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UN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사회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
- 사회적 장벽이란 사물, 제도, 관행, 관념 및 기타 일체의 것으로 사회의 다양한 물리적·제도적·관행적 장벽으로 규정
- * (WHO의 다양한 장애 개념) 구조물, 적절한 운송수단 부족, 시·청각 장애인 편의제공 부재, 지원기술 부족, 정책과 법령 부재, 부정적 인식, 참여와 기회 부족 등

②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범위 확대

- 5년 주기로 수립·시행 중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체계성·실효성 및 지역특성 반영, 중앙-지자체 연계 강화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환경 분석, 필요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종합계획의 이행력 강화
- * (現 종합계획 포함사항)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자체별 ‘장애인정책지역계획’ 수립 의무 신설

③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現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상시 운영·지원 체계 확보
- * '00년 구성 이후 '21년까지 제22차 회의(대면

14회, 서면 8회) 진행

- * 장애계는 위원회 위상 제고를 위해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격상 요구 (21. 3. 23,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건의사항)
-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 처리, 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각 부처 간 장애인 정책 업무 연계 강화를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 설치*
- * (유사사례) 사회보장위원회 : 복지부에 사무국 설치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소비자정책위원회 : 공정위에 사무국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4조)

④ 장애영향평가 도입 검토

- ‘장애주류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 및 정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 도입 검토
- * 장애주류화정책 (개념) 설계, 시행, 평가, 자원 분배 등 정책 개발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 (WHO, 2011)
- (예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정보화 관련 법안(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반영, 국가조달제도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매 기준 마련, 국가자격증 시험과목 내 장애 관련 법안 포함(건축사 시험 과목 중 장애인등편의법을 시험 과목 중 하나로 포함) 등
- *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UN 총회 제출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 독려
- 주요 법령 및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

- 평가 대상, 평가 도구 및 기준, 평가 지표, 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장애영향평가 도입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

⑤ 장애인의 권리 및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UN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보장 이념 및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적 기술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권, 참여권,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및 주거 방식 결정권 등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명문화
-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안전대책 마련, 소득 보장 등 각 주요영역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주거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보장

⑥ 장애인 학대 대응방안 강화

- 장애인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강화
- 장애인 학대에 대한 피해자 응급조치 및 학대 행위자 벌칙 등 구제방안* 등 現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권리보장법으로 이관
- * 장애인학대 범죄관련 신고의무 부과, 취업 제한 조치 재발방지 지원, 보조인 선임 및 변호사 특례,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등
- 학대행위에 대한 즉각적 개입 및 반복적 학대발생 예방에 대한 적극적 행정적 조치 실시를 위해 시정명령 실시 근거 신설

⑦ 장애인개발원 개편

- 現 장애인개발원*의 기능을 개별사업 중심에서 정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 * 정책지원 기능 수행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명칭 관련 논란 존재

- 법령·제도·정책·사업연구·평가·모니터링 등 정책지원 기능 수행
- 출연기관화,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신설하여 기관 공공성 강화
- * (유사사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V 차이 드러난 간극(間隙), 장애계 우려 및 쟁점사항은?

현실 가능한 선에서의 법 체계 정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를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개념으로 정의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간한 장애인의 권리를 조항별로 묶어내는 것으로 법 제정 방향을 밝히고 있음. 이는 장애 정의와 권리는 외면한 채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정의한 현행 의료중심의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정부는 기본법적 성격의 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을 발표(2021. 2)하면서 장애인권리옹호 및 권리침해방지 강화 방향을 내세웠으나, 권리 및 권리침해의 범위 확대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하고, 장애인학대 대응방안 강화를 담은 현 장애인복지법의 단순 이관에 그치고 있음
- 또한 그마저 학대발생 예방 및 즉각적 개입에 따른 시정명령 신설 내용 이외에는 학대피해 발생 이후 충분하고 안정적인 사후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정부 제정안의 한계 극복을 위해 우리가 담아내야 할 것은

① ‘권리’ 명시에만 머무를 것인가, 국가 책무의 명확화

- 정부는 법 제정방향에서 ‘장애인 권리기반접근’ 설명을 통해,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대상화, 객체화를 지양하고 권리주체성 강화.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확히 규정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법 주요내용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겠다고 밝힘
- ▶ 법의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해당관점의 정책 및 계획수립 명확화

[법안 조문 예시]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과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략)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권리 침해와 권리옹호의 범위 확대, 권리구제 절차 보장

- 앞서 언급했듯 정부는 별도의 권익옹호 장을 신설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애인 복지법 내용의 이관과 중지명령 추가 외 별

다른 확대 개념을 담지 않고,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자료에도 장애인학대 대응 방안 강화로 발표한 상황임

- 장애인권익옹호와 관련된 장에서는 금지행위, 학대예방과 방지의무,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등에 관한 내용에 그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역시 장애인학대 예방, 학대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학대관련 상담 및 사후관리에 국한하고 있음
- ▶ 금지행위 내 권리 침해 정의 강화, 권리옹호센터 역할 확대, 쉼터 설치 의무화, 단체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 명확화

[법안 조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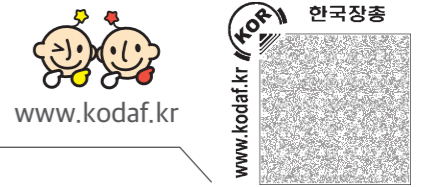
제44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7. 그 밖에 제2장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 침해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

제45조(장애인 권리침해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67조(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이하 “장애인쉼터”라 한다)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권리옹호센터 역할, 단체소송 등 조문(안)은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안 참조



③ 장애 주류화 기반 마련

- 정부의 법 제정 주요내용 발표와 같이 ‘장애 주류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 및 정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 외 종합적 개념 도입이 필요함
- 서비스에 대한 선택 권리에 대한 추가 명시를 통해 소비자로서의 권리 개념 도입 모색
- ▶ 장애주류화 조치 개념 명시, 장애영향평가 및 인지예산결산, 국가장애인위원회 격상, 당사자 선택에 대한 개념 추가

[법안 조문 예시]

제5조(장애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 포괄적 관점을 통합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법에서 “장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법령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예산 및 결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예산 및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장애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예산 및 결산의 실시방법,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장애인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 ① 장애인은 탈시설 및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통합 및 자립하여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주거, 건강 및 재활, 교육, 여가·체육·문화, 정보 등의 삶의 제반 영역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략)

④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및 각종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선택 또는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21대 국회 내 논의 출발점에 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향후 주요 쟁점사항은?

- 8월 말 현재, 정부가 발표한 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제21대 국회를 통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 장애계의 바람을 담은 대체 발의안과 함께 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기존 제20대 국회 발의안의 문제제기와 한계 인식을 전제로 반드시 담아내야 할 핵심가치에 집중하되, 법제정 과정에서 다뤄질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와 대응 역시 중요할 것임

① 권리보장법과 서비스법 이원화 현실 속 장애인 권리보장 실효성은 있을까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 돌봄 사업과 장애인 탈시설 정책,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법 내용과 구조가 장애인들의 욕구를 담아낼 그릇이 마련되는가’. 즉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삶이 또다시 분절된 서비스와 자격심사, 선택권 배제로 인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실효성을 담보한 서비스 연계 청사진을 담아낼 수 있을까’ 살펴봐야 할 것임

※ 정부 제정 법안 구성안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자료 참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의 권리와 권리의 실현	제2장 장애인 복지 지원
제3장 장애인정책종합 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
제4장 장애인 권익옹호	제2절 근로
제5장 보칙	제3절 건강 및 재활
제6장 벌칙	제4절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제5절 지역사회 자립지원
	제6절 장애인 가족지원
	제3장 장애인서비스 제공 절차
	제4장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제5장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② 자원마련은 어떻게, 무엇부터 할 것인가

- 새로운 권리보장법안은 장애 정의와 권리보장의 명시 외에 국가장애인위원회 위상 강화, 권이용호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장애주류화 조치(인지예산 및 결산, 장애영향평가) 개념 도입과 함께 자원확보를 위한 장애인지원기금 마련 등 예산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조항을 포함하게 될 것임
- 기존 국가재정법 개정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예산 마련 방법의 실효성 확보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임

③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새로운 개념 도입 위한 담론(談論) 형성 필요

- 기존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안 기준으로, 표준소득개념의 구체적 소득보장 방안 도입, 법제·개정에 따른 장애인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논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개인별지원계획수립과 서비스 선택권 보장, 그를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 도입(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개념과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정부가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밝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특성 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되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등록-서비스신청-종합조사-사례관리-개인별지원계획수립의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 조사결과 및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신설하겠다 밝힘
- 즉,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담긴 장애인의 모습은 여전히 수급자격과 양,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대상에 머물고 있음
- 또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발굴의 대상이자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음. 그 기준과 절차도 모호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되어질 수 있는,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인 것. 한마디로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답습임
- 즉, 현재 대상으로 객체화 되어있는 장애인 서비스 신청 및 지원(전달)체계의 한계 극복의 시점과 방법, 범위에 대한 끊임없는 담론 형성이 필요함

VI 지금은 핵심가치에 주목할 때

■ 법 제정의 취지와 핵심가치를 잊지 말아야

-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해 새로운 법 제정을 요구해온 취지와 담아내고자 했던 핵심가치는 무엇인지 되새겨보아야 함

하나. 장애인의 '권리'와 권리 '주체'로서의 존재가 법적으로 보장 되는가.

둘. 장애인 개인이 복지 서비스 및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가.

셋.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그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에 반영, 참여할 수 있는가.

- 장애인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간주하고 복지수혜자로서만 접근하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꿀 때만이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는 것임. 장애인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담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의 제약으로서 규정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촉진, 보호, 보장, 존중 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정의되어야 하는 것임
- 그를 통해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 받아 선택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침해 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보장받는 권익 강화가 '권리보장'이 담아내야 할 핵심 가치임
-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살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통해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그 목표와 지향점이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되는 사회.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차법과 차일피일 미뤄지는 선택의정서 비준과 달리 단체소송과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는 사회. 바로 이 핵심가치가 지향하는 미래상일 것임

■ 언제보다 무엇이 중요한, 우리가 가야할 길

- 장애계가 바라는 권리보장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돼 새로운 논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음.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달성에 함께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새로운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를 살펴야 할 시기인 것임. 즉,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은 '언제(When)'이 아닌 '무엇(What)'이 중요한 아젠다(Agenda)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사회구성원의 삶과 국가의 책무에 대해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내고 있음. 바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임. 국가의 사회구성원 간 불평등과 양극화의 조정기능에 더해, 자원의 집행·배분에 있어 '국민'으로서의 '권리' 개념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임
- '언제까지 장애인 개인의 욕구는 정해진 복지서비스 자원과 전달체계 안에서 수용돼야만 하는 '대상'에 머무를 것인가?, '현재 정부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권리보장'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가?' 장애계가 원하는 '권리보장'의 모습을 그려가기 위한 핵심과제이자, 명제임. 향후 이어질 법 제정 과정에서 쟁점별로 폭넓고 진전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1년 8월 31일 발행인 홍순봉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진심인 당신을 찾습니다!

후보자격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의원, 기업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1. 8. 17. - 9. 10.**(18:00)

접수방법 원본(우편 접수)
사본(홈페이지 접수)
※ 원본, 사본 2가지 모두 제출

접수처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401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ablerights.kr)
기타문의: 02-783-0067

시상부문

- 인권실천부문(상금 1천만 원)
- 국회의정부문
- 민간기업부문
- 기초자치부문(국회의장)
- 공공기관부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시상식

일시 **2021. 12. 3.(금) 14:00**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온라인 중계 예정)



한국장애인인권상은 3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장애인 인권 향상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해 온
개인 및 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100건(개인 35명/단체 65개소)을 발굴·포상해왔습니다.